

보 도 자 료

작 성 부 서		정책기획위원회	담당자 언론-홍보	공경화 과장 02-2100-1453 권오영 전문위원 02-2100-145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small>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small>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담당자	한윤수 대외협력본부장 044-211-1022
		KDI	담당자	조병구 경제전략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610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 (일 시) 7월 6일(화) ~ 7일(수)
- (장 소)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3층)
- (주 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 관) KDI, (참여기관)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번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논의하고,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에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거침없이 열어가고 있으며, ‘Inclusive Korea 2021’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비전을 나르는 또 하나의 수레”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컨퍼런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신문명과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에서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그 회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까지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제 ‘회복’과 ‘도약’은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 ‘포용적 도전’**이 되어야한다”라고 밝혔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 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국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언 등 ‘**미래를 여는 정부**’, 공공의료 강화 등 ‘**복지를 확장한 정부**’, 공수처 출범 등 ‘**권력을 개혁한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 ‘**평화를 유지한 정부**’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정 운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지 못한 난제들이 남아 있으므로,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온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 가는 세계 선도국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지혜가 함께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조강연.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에서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는 삶의 전 영역을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포용과 혁신의 정책기조** 위에 과학적 방역대응, 적극적인 경제

정책, 통합적인 사회정책을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 팬데믹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 범정부적,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성공적인 팬데믹 대처는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의 주도국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감염병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은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인류의 자연 침해가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는 전염병,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세계적 팬데믹의 한 가운데 있다고 진단하며,

- 번스타인 박사는 특히 한국의 ‘Testing, Tracing, Quarantine’이라는 한국의 방역 모델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처방법이었으며, 컴퓨터 앱과 GPS, 블루투스 등의 사용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음을 강조했다.

- 지금까지 각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빠르고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간, 정부와 과학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션1.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에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원 부장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도약하기 위한 기제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공조 트렌드에도 부합한다고 진단하고,

-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경제 질서에 변화를 가져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밝히며,
 -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제도 신설, 예산사업의 집행 근거 마련 등 탄소 중립 이행 관련 법률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로 지역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고 수도권은 교통 혼잡 등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하며, 초광역권에 대한 권한 부여와 과감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세션2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에서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케어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병원급 이하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화 등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 기능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 분야로 확장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일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이차, 삼차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의 지향을 지속하되 혁신과 사회적 보장의 균형을 맞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사회구조 변화로 우리나라의 돌봄 수요는 폭증했으나 돌봄 공급은 사적 이용체계를 중심으로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공공 돌봄은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플랫폼이어야 하므로, 정부는 지역사회와 신뢰 관계에서 교환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함과 동시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션3.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관련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 앞으로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서 수사권 다원화에 따른 형사사법 新거버넌스 구축, 수사기구 전문화와 수사인력 양성, 형사사법과정에서 시민 자치의 강화, 형사사법 생태계의 미시적 권력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정부의 노력과 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압력이 작용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3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사회의 청렴도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히며,
 - 향후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경제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견인해 성장의 결과가 두루 많은 사람에게 미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며, 공정한 거래 규칙이 확립될 때 장기적인 경제활동 유발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히며,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2020년 개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의 기본이 갖춰졌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민주화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세션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에서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첨단무기 체계로 전력 강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 자율과 책임의 병행 문화 조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책임국방의 실현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는 곧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건설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협력적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했고, 이러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은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K-방역, K-문화 등 중견국 외교를 통해 인간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남북보건의협력, 인도협력에는 핵문제 등 안보문제와는 분리된 투트랙 (two-track)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 ❖ 첨부 1. 세부 일정
- ❖ 첨부 2. 연사 프로필
- ❖ 첨부 3. 세션별 발표요약문
- ❖ 별첨 1. 현장 사진(개회식 종료 직후 10:30 배포)
- ❖ 별첨 2. 개회식 인사말 및 발표자료

❖ 첨부 1. 세부 일정

일 시	내 용
7. 6(화)	1일차: 위기와 혁신, 그리고 포용
10:00~10:30	<p>개회식</p> <p>개회사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p> <p>환영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p> <p>축 사 김부겸 국무총리</p> <p>격려사 이 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p>
10:30~11:30	<p>기조강연.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p> <p>기조연설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p>
13:00~15:00	<p>제1세션.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p> <p>사 회 홍장표 KDI 원장</p> <p>발 제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p> <p>탄소중립 2050과 에너지 대전환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p> <p>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과 신지역시대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p> <p>토 론 렌달 존스 美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네이든 험트만 美 메릴랜드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센터 소장 이창훈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p>
15:20~17:20	<p>제2세션.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p> <p>사 회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p> <p>발 제 문재인 케어와 공공의료 강화 임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p> <p>사회안전망과 포용적 복지의 확장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p> <p>공공 돌봄: 지역사회 신뢰 구축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p> <p>토 론 윤장호 美 국립 국방의과대학교 교수 브루노 펠리에 프랑스 시앙스포대학교 연구이사 월렘 아데마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일 시	내 용
7. 7(수)	2일차: 공정과 평화, 그리고 도약
09:30~11:30	<p>제3세션.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p> <p>사 회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p> <p>발 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p> <p>부패방지과 청렴사회 실현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p> <p>공정경제 질서와 시장의 민주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정책기획위원회 위원)</p> <p>토 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동아시아대학원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 류동민 충남대학교 교수 이화령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p>
13:00~15:00	<p>제4세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p> <p>사 회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p> <p>발 제 북핵 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 유지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p> <p>국방력 강화와 책임국방의 실현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p> <p>포용적 국제협력과 국제외교의 다변화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p> <p>토 론 스콧 스나이더 美 외교협회 국장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재관 고려대학교 교수</p>
15:20~17:20	<p>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4년의 변화와 포용·회복·도약</p> <p>좌 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p> <p>토 론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남영숙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홍장표 KDI 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유환 통일연구원장</p>

개회식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現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 現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민생경제분과 의장)
- 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現 제8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 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
- 前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부겸 국무총리



- 現 국무총리
- 前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 前 행정안전부 장관
- 前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前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이 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現 서울대학교 비교경제연구센터장
- 前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前 세계경제포럼 글로벌미래위원회 위원
- 前 국제습페터학회 회장
- 前 유엔 개발정책위원회 위원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現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現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前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前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 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객원선임연구원
- 前 美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연구원

기조강연.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



- 現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前 보건복지부 장관
- 前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 前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



- 現 캐나다 고등연구소장
- 前 글로벌 HIV백신기업 상무 이사
- 前 캐나다 보건연구소장
- 前 새뮤얼 루네펠드 연구소장
- 前 새뮤얼 루네펠드 연구소 부국장

제1세션.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홍장표 KDI 원장(1세션 사회)



- 現 KDI 원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前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 前 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 前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 現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 現 KDI 연구위원
- 現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前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 前 일자리위원회 연구위원
- 前 한국은행 차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 現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 現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 前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장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 現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 現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
- 前 기획재정부 상상조정위원
- 前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평가위원
- 前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1세션 토론

렌달 존스 美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現 OECD 한국·일본 담당 데스크 팀장
- 現 OECD 동아시아 선임 참사관
- 前 美 국무부 소속 국제경제학자
- 前 일본 경제연구소 부소장(선임 이코노미스트)
- 前 美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국제무역 스태프이코노미스트

네이든 험트만 美 메릴랜드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센터 소장



- 現 美 메릴랜드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센터 소장
- 現 美 메릴랜드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現 공동글로벌변화연구소 부국장
- 現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근 연구위원
- 前 백악관 환경위원회 에너지·기후변화담당국 부국장
- 前 美 조지타운대학교 부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정책연구본부장, 부원장 역임)
- 現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에너지혁신분과 간사
- 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분과위원회 위원
- 前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위원회 위원
- 前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 現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現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 前 중앙대학교 도시부동산연구소장
- 前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편집위원장
- 前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제2세션.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2세션 사회)



-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 前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 前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임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現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 現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前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 前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실 연구위원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장
- 前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前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 前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 現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수석부회장
- 現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現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 전문위원
- 現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前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세션 토론

윤장호 美 국립 군의관 의과대학교 교수



- 現 美 국립 군의관 의과대학교 의과대학원 부교수
-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 연구원
- 前 美 오리건주립대학교 공중보건·인간과학대학 보건행정과정 부교수
- 前 세계보건기구 스위스 제네바 본부 자문위원
- 前 美 조지아 서던대학교 보건행정과정 부교수

브루노 펠리에 프랑스 시앙스포대학교 연구이사



- 現 프랑스 시앙스포대학교 연구이사
- 前 스톡홀름대학교 객원교수
- 前 美 노스웨스턴대학교 객원연구원
- 前 美 버드대학교 유럽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前 유럽대학연구소 장 모네 연구원

윌렘 아데마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



- 現 OECD 사회정책국 가족·젠더·주거정책·사회지출통계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 前 OECD 아시아사회·보건지원과장
- 前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정책애널리스트
- 前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사회소외 리뷰 프로젝트, 한국의 혁신적인 사회지출·고용시장·사회정책 리뷰 프로젝트 담당 이코노미스트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 前 파리정치대학 유럽연구소 객원연구원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평가센터 센터장
- 前 인천발전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제3세션.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3세션 사회)



- 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한국형사정책학회장
- 前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前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이국윤 한동대학교 교수



- 現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 現 법과사회이론학회장
- 現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선임직 이사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前 한국헌법학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책임자
- 前 전미법률가재단 객원연구원 및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現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現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과장
- 前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조직팀장
- 前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대외협력홍보팀장
- 前 (사)반부패국민연대 기획실장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現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現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 前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前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평가위원

3세션 토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現 한국법철학회 학술이사
- 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 실장
- 現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위원
- 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前 법무·검찰개혁위원회(2기) 위원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동아시아대학원장



- 現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겸 동아시아대학원장
- 現 한독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 측 자문위원)
- 現 베를린-브란덴부르크학술원(구 프러시아 왕립학술원) 정회원
- 現 아카데미아 오이로페아(유럽 한림원) 정회원
- 前 한독통일외교안보정책 자문위원(독일 측 자문위원)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세계헌법학회(IACL) 제10차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 前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前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



- 現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문화연구 및 동방언어학과 교수
- 前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국제센터 초빙연구원
- 前 유럽 한국학회(AKSE) 이사회 이사
- 前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문화연구 및 동방언어학과 부교수
- 前 경희대학교 러시아어과 강의전임강사

류동민 충남대학교 교수



- 現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現 한국사회과학회 이사장
- 前 일본 게이오대학 특별초빙교수
- 前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이화령 KDI 연구위원



- 現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現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사
- 前 미국 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 방문학자
- 前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前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 前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제4세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4세션 사회)



- 現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한반도분과위원장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장
-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위원장
- 前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現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前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 前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연구교수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 現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장 겸 북한연구센터장
- 現 국방부 군비통제 한미 공동연구 책임
- 現 외교부 한미 행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책임 및 한국비확산원자력저널 편집장
- 現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現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前 美 국방부 싱크탱크(FMSO) 국제선임연구원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現 북한연구학회 이사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 前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前 美 조지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강사

4세션 토론

스콧 스나이더 美 외교협회 국장



- 現 美 외교 협회 한미정책국장 및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 前 아시아재단 국제관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 前 美 평화연구소 조사 및 연구 프로그램 아시아 전문가
- 前 아시아 소사이어티 현대사회문제프로그램 국장 대행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現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現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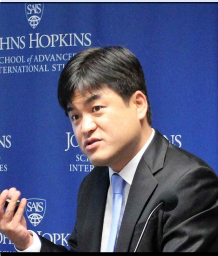
- 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現 서울대학교 국제안보센터 소장
- 現 국방부 공군, 합참, 한미연합사 자문위원
- 現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정책평가위원
- 前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장
- 前 美 브루킹스 연구소 정책연구센터(CNAPS) 펠로우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現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現 한국국방연구원 영문저널(KJDA) 편집위원장
- 前 청와대 안보실 선임행정관
- 前 국방대학교 겸임교수
- 前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 前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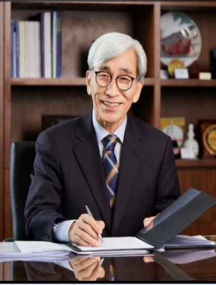
정재관 고려대학교 교수



- 現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前 美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과 교수
- 前 美 코넬대학교 정치학 박사
- 前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
- 前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4년의 변화와 포용·회복·도약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종합토론 사회)



- 現 제8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 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
- 前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 現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 現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 前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장

남영숙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 前 주노르웨이 대사
- 前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제2교섭관
- 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 지역협력과장
- 前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코노미스트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現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現 총리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 前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 前 (주)나우콤 대표이사, 아프리카TV 창립

홍장표 KDI 원장



- 現 KDI 원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前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 前 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 前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 前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 前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한국형사정책학회장
- 前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前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 現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한반도분과위원장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장
-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장
- 前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첨부 3. 세션별 발표요약문

[기조강연.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발표 1. 포용과 혁신의 힘 - 위기를 발판으로 도약하는 한국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

- 삶의 전 영역을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포용과 혁신의 정책기조 위에 과학적 방역대응, 적극적인 경제정책, 통합적인 사회정책을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 팬데믹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
- 3T¹⁾(Test-Trace-Treat)로 요약되는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방역대응은 감염률과 희생자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국가 도약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음.
 - PCR 진단검사법의 개발, 특별입국절차 도입, 승차검진법 시행, QR코드 사용,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창의적인 방역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함.
 - 창의적인 방역대책들이 연속적으로 제안, 채택, 시행될 수 있게 한 『적극적인 국민참여, 유연한 소통구조,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의 사회적 인프라는 팬데믹 대처를 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도약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음.
- 범정부적,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성공적인 팬데믹 대처는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의 주도국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1)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

[기조강연.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발표 2. 팬데믹 대응: 우리는 다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가?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는 많은 생명을 잃고 경제가 섯다운되는 등 글로벌 위기에 직면, 팬데믹의 한 가운데 있는 상황
 -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지만, 전통적 공중보건 대책이 효과를 보았으며 307일 이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달성
 - 이는 기초과학, 글로벌 협력, 과학 및 공공정책 간의 조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성공임.
-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인류의 자연 침해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팬데믹,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 글로벌 수준의 파괴적인 사건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므로 이제는 다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시점
 - 특히 한국의 'Testing, Tracing, Quarantine'이라는 한국의 방역 모델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처방법이었으며, 컴퓨터 앱과 GPS, 블루투스 등의 사용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음.
 -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기가 올 때 우리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 각국 정부는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정책 입안자와 과학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

[세션 1.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발표 1.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도약하기 위한 기제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공조 트렌드에도 부합
 - 세계 경제는 2020년 하반기 경제활동이 재개된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보급되면서 올해 중 빠르게 회복
 - 그러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흔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 및 성장 제고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청년, 저숙련 노동자 등의 고용악화로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 상황
 - 이에 우리 정부는 경제 회복력 강화, 소득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역 균형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
-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발표 2. 탄소중립 2050과 에너지 대전환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 탄소중립은 어느 국가도 거스를 수 없고 거슬러서도 안 되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시대적인 당위로서,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할지와 방법을 찾아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
 - 국제사회가 온도 목표에 최초로 합의한 이후 2020년 말까지 127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 기업들이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바꾼다면 전 세계 에너지시장을 변화시키며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음.
 - RE100은 2014년 출범,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특정 연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13개였던 참여 기업수는 2021년 2월 기준 288개에 달함.
 - ESG 경영이 기업 평가나 투자 결정에 중요해져 RE100 선언 자체가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되고, 참여 기업들이 협력업체에도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요구하는 등 RE100은 세계 시장을 바꾸고 있음.

- 탄소중립 선언 국가들의 대내외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시장규칙과 경제 질서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
 -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GDP의 37.5%에 이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6%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국경세 부과, RE100 기업 증가는 상당한 부담인 만큼 과거의 에너지체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제도 신설, 예산사업의 집행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률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

발표 3. 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과 신지역시대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로 지역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고 수도권은 교통 혼잡 등 과밀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이 필요
-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 발전 동력으로 초광역협력 육성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초광역협력은 필수 과제로 자리매김
 - 우리나라는 지역 주도의 산업적·기능적 연계 기반 구획을 통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초광역협력 기반의 신지역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에서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정책 처럼 정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하고, 동시에 초광역권에 대한 권한부여와 과감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초광역협력 인프라 구축, 핵심 산업 육성, 인재 혁신 등 중장기적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직접적 지방교부세 지원이 필요

[세션 2.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발표 1. 문재인 케어와 공공의료 강화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은 질환 특성상 사전 예방이 중요, 그러나 현재의 사익 추구적인 의료 체계에서는 치료중심적인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고 예방에 강조점을 두기 어려운 현실
 - 특히 공공병원이 양적·질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민간은 수익성을 논리로 보건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등한시하며, 수도권에 우수한 종합병원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수도권에는 소규모 병원이 공급돼 있는 상황 등으로 건강 격차가 발생
 - 현재의 체계로는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문재인 케어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병원급 이하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 또한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화 등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 기능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 존재
-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 분야로 확장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
 - 입원과 외래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정립하고, 일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이차, 삼차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발표 2. 사회안전망과 포용적 복지의 확장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은 저성장과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선정하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제 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단계적 급여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지원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소득분배 측면에서 가처분 소득 기준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공적 이전의 효과 확인
 -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재정 투자가 이뤄졌으며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의 국가 역할 확대 등에서 주요한 성과를 이룸.
 - 2021년에는 2016년에 비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이 76.8조(2016년 대비 62.5%) 증가했으며, OECD 사회지출비 기준으로는 3년간(2016~2019) 2.3%p 증가하여 투입 재정의 확대가 이뤄짐.
-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의 지향을 지속하되 혁신과 사회적 보장의 균형을 갖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발표 3. 공공 돌봄: 지역사회 신뢰 구축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사회구조 변화로 우리나라의 돌봄 수요는 폭증했으나, 돌봄 공급은 사적 이용체계를 중심으로 시장에 의존
 - 돌봄의 사적 이용체계는 정부가 비용만 부담하고 민간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구조,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돌봄이 쉽게 중단 될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음.
 - 돌봄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로 정부가 제도를 발달시켜 왔으나, 전달체계에서의 정책 및 이용자 관리는 모호한 상태
-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시도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무로 권리-책임 관계를 정립, 이는 돌봄의 산업화를 추구한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점
 - 공공 돌봄은 포용국가 이동복지와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정책 등으로 구체화됐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질 관리를 실현
 - 그러나 공공 돌봄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성과는 높을 수 없음.
- 공공 돌봄은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플랫폼이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
 -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 신뢰 관계에서 교환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해 책임 사무를 가능케 하고, 진입 관리와 함께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것

[세션 3.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발표 1.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문재인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어져 온 형사사법 관련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인사제도 정비,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시행, 인권중심 치안 행정 확립 및 정보경찰 제도 정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업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전(예정) 등
- 해방공간에서 선택된 검찰 중심 형사사법기구가 국가주의 개혁을 도외시하고 민주화 이후 검찰 권력의 지나친 강화와 이에 관련된 부패가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주로 자유주의 개혁 담론의 요청에 부응하여 형사사법의 재제도화를 추진
 - 특히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헌정사상 유례없는 여러 고비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검찰 주도의 적폐청산과 법무부 주도의 검찰개혁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형사사법개혁의 일관된 비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공화주의 관점에서 국가주의와 자유주의를 아우르는 형사사법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맥락에서 향후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수사권 다원화에 따른 형사사법 新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사기구 전문화와 수사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형사사법과정에서 시민 자치 강화, 형사사법 생태계의 미시적 권력 균형을 이뤄야 할 것

발표 2. 부패방지과 청렴사회 실현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부패방지과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
 -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를 위해 법안을 제출하였고,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설치했으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 공익신고자 보호를 확대(공익신고 대상법률수 279개 → 471개)하고 국민 소송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함.
 - 횡령, 배임, 뇌물수수, 알선수뢰, 알선수재의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엄정 적용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국민모니터단을 출범했으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 중임.
-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2016년 52위에서 2020년 33위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고 30위권대 초반 순위로 진입
 - 정부의 노력과 부패 방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사회적 압력이 작용해 한국 사회의 청렴도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상승
 - 그러나 국회 입법화의 진척이 느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제가 터진 후 대응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향후 공공부문 중심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경제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

발표 3. 공정경제 질서와 시장의 민주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견인해 성장의 결과가 두루 많은 사람에게 가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임.
 -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규칙을 확립할 때, 경제주체들이 정당한 보상과 대가에 대해 믿게 되며 이는 더 노력할 수 있는 유인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더욱 활기찬 경제활동을 유발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

- 공정거래법과 상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2020년 개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의 기본이 갖춰졌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민주화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경제력집중 억제와 시장민주주의 회복) 신규 지주·자·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상향해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
 - (사익편취 규제와 기업 의사결정의 민주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 사익추구 행위를 모회사 소수주주가 감독
 - (갑을관계 규제와 수직적 거래관계의 민주화) 부당경영간섭금지, 하도급대 금지급 활성화, 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를 이뤘으며, 생애주기 쉰단계가 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편의점업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규약을 체결
 - (사인의 권리구제수단 확보와 피해구제 활성화)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도입

[세션 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

발표 2. 국방력 강화와 책임국방의 실현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 문재인 정부는 국방력 강화와 책임국방의 실현을 이룩해오고 있으며, 이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건설임.
- 첫 번째, 국방예산 확보로 첨단무기 체계를 갖춰 획기적인 전력을 강화
 - 2020년 기준 3년만에 40조에서 50조로 국방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으로 강한 국방을 구현했으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과 우주기술 개발 교두보 확보
- 두 번째,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노력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한 전략적 동맹으로 동맹관계를 격상하는 한편 사이버, 우주, 미사일 등 모든 영역의 한미 협력 증진
- 세 번째, 자율과 책임의 병행 문화 조성
 - 병역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장병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양성 평등 및 군인의 전투임무 집중에 위한 여건 개선
- 네 번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약속 이행을 지속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발표 3. 포용적 국제협력과 국제외교의 다변화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중 간 가치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중심주의 확산과 강대국 경쟁 심화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대두시킴.
 - 국제외교도 과거 국가 중심의 전통외교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공공외교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프트 파워'를 비롯한 소셜 파워 강화가 더욱 중시됨.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정책과 포용적 국제협력에 대해 살펴봄.
 - 우리 정부는 협력적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K-방역, K-문화 등 중견국 외교를 통해 인간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핵문제 등의 안보문제와는 분리한 남북보건의협력, 인도협력 등에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적용할 필요
 - 포용적 스마트 외교전략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유엔의 SDGs를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적용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견국 외교를 넘어서는 인류 보편적 어젠다 발굴에 매진할 필요